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공무원 연금개악 저지! 2015 총파업 승리!

# 길

##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소식지

발행인. 안성환 | 편집. 선전부 | 충남 아산시 온궁로 4 3층 | kctucn.jinbo.net | mjcn@hanmail.net | 전화. 041-549-4081 | 2015-2호 (2015.02.16)

### 충남본부 6기 임원 선거 결과

## 유희종-안성환-정환윤 후보 92% 찬성으로 당선

12일 진행된 충남본부 6기 임원선거 개표 결과 유희종-안성환-정환윤 후보(단독)가 투표율 52%, 92%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신임 본부장은 곧바로 민주노총과 함께 4월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본부 사무처와 투

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을 빠르게 진행하고 이후 운영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거쳐 투쟁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4월 총파업 조직화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선 만장일치로 총파업 결의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박근혜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투쟁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간접고용-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투쟁 등 3대 현안 투쟁 조직화를 통한 '재벌 배불리기 대노동자-서민 살리기' 구도를 중심으로 주요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위한 4월 선제적인 상반기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대의원들은 '박근혜와 재벌의 폭주를 멈추자! 가자, 노동자 서민 살리기 총파업으로!' 제하 결의문 채택을 통해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청년 민주노총이 이 땅 모든 민중의 염원을 담아 박근혜와 재벌에 맞선 노동자 서민 살리기 총파업을 엄중히 결의했다.

충남지역본부 소식지가  
동지들결으로 배달됩니다

충남본부 홈페이지에 PDF, 한글, 그림파일의 형식으로 게시할 예정이고, 간부동지들에게는 메일로도 발송합니다. 또 그림파일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해 각 산별 조직담당자 동지들에게 배포합니다. 각 산별, 단위사업장 간부동지들께서는 소식지를 전체 조합원의 손에까지 배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에 실었으면 하는 기사, 사진, 만평 등 기고하고 싶은 내용을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mjcn@hanmail.net>

## “비정규직 차별이 정규직 과보호때문이라고?” 4월 총파업으로 추락하고 있는 박근혜에게 마지막 일격을!



박근혜 정권은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생소한 단어를 들고 나왔다. 여기서 말하는 이중구조란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핵심부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표현되는 주변부 노동자들 사이의 고용과 임금의 격차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격차를 낚는 핵심적 원인을 핵심부 노동자에 대한 과보호로 설명한다. 이렇다보니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당연히 이 과보호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맞춰진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바로 이러한 전제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다. 그들은 정규직이라는 정상적 고용형태를 비정상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그들이 말하는 이중구조 해소는 그간 우리가 주장해온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철폐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유로운 해고,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의 사용’이라는 표현으로 집약되는 정부의 안은 결국 전체 노동자의 처지를 하향평준화시키는 방식으로 그 내부의 차이

를 줄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점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최소한의 중립성도 갖추지 못한 프레임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지금껏 우리사회는 최소한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철폐가 사회경제정책의 주요한 과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같이해왔다. (물론 실천은 다르지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차별철폐는 정규직을 정상적 고용형태로 간주한 후에야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를 줄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점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최소한의 중립성도 갖추지 못한 프레임처럼 정도로 자본 편향적 정책이다.

문제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이중구조 즉 불평등의 문제다. 여기에 더해 소수 재벌의 경제 집중은 평등 또는 경제 민주화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극도의 모순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 분배율(전체 국민소득 중 노동의 몫)은 OECD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기업은 살찌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곤궁해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이번 안은 이러한 점에 철저히 눈을 감고 있다. 우리사회의 불평등의 근본적 문제는 노동과 자본의 문제다.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복지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최소한 한나라의 노동정책은 사회전체의 맥락에서 설정되어야 하고, 그것은 노동과 자본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4월 총파업으로 추락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자.

# 사측의 '기초 근무 질서 지키기' 현장 통제 시도 우리는 조직적·집단적 현장 투쟁으로 반드시 이긴다!



작년 10월 김주표라는 자가 낙하산을 타고 유성기업 노무이사로 왔다. 이 자는 오자마자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첫째 관리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매주 회식과 토요일 오후 운동장에서 축구, 부서별로 여행을 다녀오게 하고 있다. 둘째 지회의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 맞지도 않은 법원 판례들을 들이대며 조합원들을 위축시키고 경쟁사에 물량을 빼앗겼다는 핑계로 주말특근을 없앴다. 또 올해 들어와서는 현장 기초질서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기초 근무질서 위반에 대해 잔업, 특근 배제 및 징계, 공정재배치 등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측은 실제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당직을 1명에서 4명으로 늘려 당직으로 하여금 30분 간격으로 몰래 녹취와 동영상을 촬영하며 현장을 감시하게 하

고 있다. 사측의 기초 근무질서 준수사항의 내용은 △음주상태로 작업금지 및 건물 내 금연 △공장 내 안전화 착용 및 작업복 변형착용 금지 △근무시간 준수 및 승인된 업무와 생산업무 목적 외 자리이석 금지 △상습적인 지각, 외출, 조퇴, 결근 등 생산에 저해를 주는 행위 금지 △취침 및 핸드폰, 노트북 사용 및 책, 잡지, 신문 등 독서 금지 등이다. 이에 지회는 개인적인 대응이 아닌 조직적, 집단적 대응을 기본원칙으로 정해서 모든 조합원이 징계를 맞는다는 각오로 현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3일부터 임원과 해고자 중심으로 현장 오체투지 투쟁
- 중식시간 10분전 인근 부서 동지들과 함께 모여 식당으로 이동하기
- 근무시간 중 조합원 전체가 일제히 지회 사무실 앞에 모여 휴식(흡연)하면서 상황공유하고 현장 복귀하기
- <생산 2과> 조합원들에게 호루라기 나누어 주고, 현장에 관리자가 나타나면 먼저 확인한 조합원이 호루라기를 불어 전체가 할 수 있도록 하기
- <생산1과> 기초근무질서 위반 2명에 대해 연장근로를 못하게 하자 부서원 전체가 2주째 연장근로 거부
- <검사과> 부서장이 현장에 있을 때 순환적으로 부서장 면담투쟁을 통해 부서장이 현장에 붙어있지 못하게 하기
- 조별 파상파업을 통해 사측에서의 파업시간 체크 어렵게 하기

위와 같은 투쟁의 결과 야간 당직자의 현장 감시가 느슨해지고 있다. 지회는 쟁의권이 없었던 지난 2011년에도 해고와 징계를 통한 사측의 현장 통제 시도를 무력화시킨 바 있다. 지금은 그 당시보다 좋은 조건에서 정당한 쟁의권을 가지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회는 사측의 기초 근무 질서라는 이름하에 자행되는 현장통제를 무력화해 나갈 것이며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할 것이다.

<유성지회 법규부장 신동철>

## 당진시위원회, 박근혜 정권 퇴진 대시민 선전전 진행



부패, 정당 강제 해산이라는 반민주 폭거, 그리고 최근 비정규직 종합 대책으로 대표되는 노동부문 구조개혁을 통한 노동자 민

당진시위원회는 지난 2월 5일 박근혜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거리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날 거리선전전에는 당진화력환경지부, 당진시청비지회, 학교비지회, 현대제철지회, 현대제철비지회 등 당진시위원회 산하 노동자들이 자체 제작한 선전물과 현수막을 들고 박근혜정권 퇴진의 필요성을 일반시민에게 알려냈다.

당진시위원회는 지난 1월 대표자 회의에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부정선거 시비속에 출범한 박근혜정권의 인사와 세월호로 확인된 무능과

중에 대한 선전포고 등 전방위적 공세에 사안별 대응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공유하고 민주노총의 총파업 기획에 조응하는 선도적 지역실천을 결의한 바 있다.

이날 선전전에 참가한 지역동지들은 지역에서의 새로운 시도와 실천에 고무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연대와 자신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당진시위원회는 공식적인 평가를 통해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하여 향후 적극적으로 투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주요 사업 일정



날짜	시간	장소	내 용
16일(월)	08:30	천안시청	충남문화예술단지회 출근 선전전
	09:00	유성지회	민주노총 현장순회
17일(화)	10:00	온양역, 천안역	설 귀향 선전전
	13:00	서산터미널	설 귀향 선전전
24일(화)	18:00	철도노조 사무실	천안시위원회
	18:30	서산사무실	서태안위원회
25일(수)	10:00	서울 프레스센터	민주노총 출범식 및 총파업 투쟁 선포식
	10:00	도고글로벌리콘도	충남지역노조 정기대의원대회
26일(목)	13:30	도고토비스콘도	전교조 세종충남지부 출범식 및 일꾼 연수
	14:00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확대운영위
	18:30	보령시청	보령시위원회
	19:00	당진시청	당진시위원회
27일(금)	16:00	본부회의실	충남본부 2월 운영위원회